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제576호

지면안내

04 사회 청년희망적금, 누군가에겐 희망고문

05 기획 '군 휴학'은 사라질 수 있을까?

06 학술 냉전의 바다에 빠진 외딴섬 제주

08 광고 제16회 사진공모전 현상공모



▲본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딛고 2년 만에 학생들로 붐비는 캠퍼스를 맞이했다. 대학본부는 대면 수업 및 대면 활동을 권장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022년도 1학기를 대면 수업 원칙으로 시작했다. 일부 수업의 경우 4주차까지 대면이 아닌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기도 했으나 이후 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주·야 교차 신청 성공하셨습니까?

지난 3월 3일 진행된 2차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주·야 교차 신청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야 교차 신청에서 학생은 본인이 소속되지 않은 시간대의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강신청을 위해 대기하던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는 등 불편함이 야기됐다.

교차신청이 마비된 것은 신청을 개시하는 오전 11시부터였으며, 대략 4분간 이어졌다. 대학본부 측은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정보화팀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약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학생 측은 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상화가 1분 만에 될지 2분 만에 될지 '깜깜이'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마무리한 것은 공정하다기보다 운의 요인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4~5분 만에 강의를 신청하도록 조치한 것은 공정성을 배제한 아쉬운 대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해당 문제는 수강신청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의 수강신청 시스템은 수기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인데, 수강정정 기간의 종료 시간을 설정할 때 실수로 작년 연도가 입력된 것이다.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과정과 조건이 까다롭다. 담당자가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승주(학사지원팀) 팀원은 "종료 시간을 잘못 입력하면 학생에게 시스템이 열리지 않는다"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혔다.

» 2면에 계속

김지윤 기자 jizhej@naver.com

4월 6·7일, 학생자치기구 재선거 실시

2022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 대상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창의융합대학이다. 투표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선거 후보는 모두 단독 입후보했으며, 이들은 과반의 찬성을 획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이번 동아리연합회 선거에는 '동화' 선거 운동본부(이하 선본)가 단독 출마했다. 정회장 후보는 권수민(인문 3), 부회장 후보는 신하늘(사회과학 3)이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선거에는 '하루' 선본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정학생회장 후보는 허민영(인문 4), 부학생회장 후보는 안윤석(인문 4)이다. 이번 학기 새롭게 신설되는 제1대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는 'you:us'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학생회장 후보와 부학생회장 후보에는 각각 송유경(인문 3)과

오주림(인문 2)이다. 각 선본의 선거 유세는 지난달 23일 시작됐으며,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는 온·오프라인 모두 양일 9시부터 23시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투표소는 미래관 앞에 1개소만이 설치된다. 개표는 8일 16시로 예정돼 있다. 만약 투표자 수 미달로 투표가 연장될 경우, 8일 9시부터 18시까지 투표가 이뤄지고 19시에 개표가 시작된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지난 30일 상상관 1층 상상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는 한성대학교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으며 녹화 영상 역시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상태다.

김산(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올해 치러지는 재선거 선거 유세도 작년 총선거에 이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투표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2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3기선발(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4기선발(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2년 3월 2일 ~ 4월 8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필기고사 : 4. 16.(토), 합격자 발표 : 5. 6.(금)
- 면접평가 : 5. 23.(월) ~ 6. 17.(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7. 15.(금)
※ 세부사항은 '22년 모집요강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원대학 학군단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현 상황(코로나 19)관련 선발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발생한 수강신청 문제, 학생 혼란 빚어

데이터 입력 오류가 원인, 시스템 보완 예정

2차 수강신청 정정기간이었던 지난달 3일 주·야 교차신청을 개시한 오전 11시부터 서버 마비로 학생은 교차신청을 할 수 없었다. 문제는 4분 뒤에 해결됐지만 수강신청을 희망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했다. 대학본부 측은 수강신청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부의 사후처리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수강신청 담당자의 단순 오키로 인해 발생했다. 수강신청 종료 날짜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작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태를 인지한 담당 부서는 데이터를 정정했고

수강신청은 4분 안에 정상화됐다. 안승주(학사지원팀) 팀원은 “본교 수강신청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강신청이 예정된 당일 아침에 담당자가 수강신청의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입력해야 한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불과 몇 분 만에 수습됐지만, 교차신청을 위해 대기하던 학생들은 혼돈에 빠졌다. 본부에는 학생의 전화가 빗발쳤고, 문의 전화를 한 학생에 한해 서면신청의 방식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 팀원은 “학과에서 서면신청을 위해 염두하는 자리가 있다. 만약 정원이 30명일 경우 최대 33명 혹은 34명까지 받아주기도 한다”며 “많은 학생이 수강신청

문의를 위해 학사지원팀으로 연락했다. 전화 온 학생을 대상으로 잔여 인원이 있는 강의에 한해 조교 및 교수와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사후처리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서에 직접 연락한 학생에 한해서만 서면신청 방식을 알려줌으로써 본부를 믿고 인내한 학생들에게 모 든 피해를 떠넘겼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본교가 전체 공지를 게시해 피해 학생의 규모를 조사해야 했다”며 “이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후처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팀원은 “모든 학생이 교차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 동일한 상황이었다”며 “피해를 본 학생을 전부 구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작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던 충남대학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수강신청 일정을 2주 연기해 학생 모두가 동시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타 대학의 대처 방식에 본교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미(학사지원팀) 팀장은 “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강신청 재시작은 학사지원팀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 다만 완전히 수강신청을 초기화한 후 재시작하면 기존에 신청에 성공했던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 후에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본교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관련 시스템을 보강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이번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수강신청 데이터 정보 입력 시 오차가 발생하면 타 항목이 입력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어서 매 학기마다 조금씩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다. 학생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몇몇 대학은 수월한 수강신청을 진행하고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지회장은 “교내 수강신청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2022학년도 상반기 학생자치기구 예산안 확정

지난 17일에 진행된 '2022학년도 상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주요 학생자치기구의 상반기 예산안이 인준됐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학생기구는 승인된 지출 계획에 따라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다.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인준된 예산은 총 20,475,210원이다.

총학생회 'BASE'는 총 5,156,210원을 승인받았다. 예산안 세부 항목으로는 ▲가요제 ▲어린이날 행사 ▲낙산제전 ▲만우절 행사 ▲환경개선 캠페인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총대의원회 '순백'은 총 2,812,250원을 예산으로 승인받았다. 세부 항목은 ▲재선거 ▲대의원총회 ▲대의원 간담회 ▲총대의원회 감사 상임위원 ▲상임위원 감사 OT ▲우수대의원 선정 ▲일상운영비 ▲사업예비비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복지위원회 '하늘'의 상반기 예산은 총 5,333,530원이 승인됐다. 상반기 예산안 항목으로는 ▲시험기간 응원 간식 사업 ▲대여사업 ▲토익 및 자격증 교재 배부 ▲그린캠퍼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홍보 ▲주차권 공동구매 사업

▲소독 및 방역체계 구축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BY'의 예산은 총 1,998,500원으로 인준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험기간 간식 및 격려 물품 사업 ▲개교 50주년 기념 사회과학부 이벤트 ▲프린트 지원 사업 ▲카카오톡 채널 ▲방역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있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오브제'는 예산으로 총 1,942,050원을 승인받았다. 세부적으로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 사업 ▲수시 OT ▲짜선배·짜후배 행사 ▲어른이날 행사 ▲전시문화 행사 ▲월간디자인 행사 ▲프린트 지원 사업 ▲방역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

IT공과대학 학생회 '재회'는 1학기 예산으로 총 2,718,100원을 인준받았다. 이는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 사업 ▲짜선배·짜후배 행사 ▲만우절 행사 ▲대여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카카오톡 채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미래플러스대학 학생회 '밀그림'이 인준받은 금액은 총 541,270원으로 ▲뒷북 새내기 배움터 ▲보조배터리 확보 ▲소모임 활성화 ▲동문 인터뷰 ▲사업



김산 총대의장이 대의원들의 의견 건행사를 확인하고 있다.

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창의융합대학 ▲동아리연합회의 1학기 예산안 인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해당 학생기구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학생기구는 4월 6~7일 양일간 예정된 재선거 이후 예산안을 인준받을 예정이다. 총회를 진행한 김산(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이번에 시행되지 못한 학생자치기구의 예산안 발표는 재선거가 치러진 후 5월쯤 시행할 것”이라고 관련 계획을 전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HS 트랙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오는 4월 8일까지 'HS 트랙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월까지 다양한 진로 및 전공 탐색 활동을 제공한다. 희망자는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고, 활동 실적에 따라 비교과 포인트와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선발 결과는 4월 13일 문자를 통해 개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개인과 팀을 포함해 총 2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6월 25일까지다. 또한 본 활동은 ▲진출분야 동향조사 ▲콘텐츠 분석 ▲직업인 및 교수님과 교류 ▲졸업생과의 교류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학생들은 활동을 바탕으로 진

로 탐색, 전공지식 함양 등의 내용을 담아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최대 6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통과하면 이수 장학금 5만 원이 제공된다. 우수자 장학금은 ▲S급(상위 10%) ▲A급(상위 20%) ▲B급(상위 30%)으로 나뉘며 각각 20만 원, 10만 원, 5만 원이 차등으로 추가 지급된다. 또한 제출 결과물의 유형과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비교과 포인트 50pt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안은선(진로취업지원팀) 담당자는 “본인의 희망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공유할 기회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강승원 기자 ksw905@hansung.ac.kr

'편지쓰기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이하 지파운데이션)에서 오는 8일까지 편지쓰기 봉사활동자를 모집한다. 본 활동에는 학내 구성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편지 8장 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휴학생에게는 시간당 비교과 포인트 5pt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이메일 혹은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봉사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펜, 엽서, 안내문

등의 준비물을 전달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수령 가능한 편지지 수는 80장이다.

봉사자는 준비물 수령 후 최대 2주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편지지와 봉사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봉사시간은 결과물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VMS를 통해 입력될 예정이다.

지파운데이션의 김다솜(회원동행팀) 간사는 “편지쓰기를 통해 후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영 기자 gusdu0329@gmail.com

2023학년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모집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가능성의 실현, 그 시작은 한성!

전공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넘어 높은 식견의 지식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일반 대학원	인문계	사상학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 기록관리학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 문학문화
			무역학과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사무
			경영학과	인사조직, 재무관리, 서비스경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사회계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과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지급결제·신금융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전자정보공학과	전자정보공학
			IT융합공학과	IT융합공학
에·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기게시스템공학과	기게시스템공학, 산업위생공학	
		시용융학과	시용융학	
		회화과	진채화, 현대미술	
		무용학과	무용공연, 무용이론, 기독교무용, 발레교수법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MD·전시디자인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	
학과간 협동과정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학	

* 대학원 지원 학과(전공)는 학부의 주전공, 부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에 한함
* 트랙제 시행 이후 입학한 학부 재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여 트랙 모과 확인 후 지원 바람 (트랙 교육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 상호 연계 확인)

지원방법 및 발표

- 모집공고 : 대학홈페이지(https://www.hansung.ac.kr/hansung/8385/subview.do)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 모집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2일(금)
- 지원방법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선발트랙 중 1개 선택 / 학석사연계과정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 모집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석사연계과정신청서(1부) 및 학부성적증명서(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종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s://www.hansung.ac.kr/hansung/8385/subview.do)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홈페이지(https://www.hansung.ac.kr/hansung/8385/subview.do)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76) 서울시 성북구 삼선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지원자격 및 학사졸업요건

신발트랙	지원 자격	학사졸업요건
학부조기졸업트랙 7+3 대학원 1학기 단속 학부 3.5년+대학원 1.5년 (총 5년과정) 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 지원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 • 학부 5학기 재학생 (7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 학과(전공)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 2022년 4월중·지원 • 2022년 5~6월중: 합격자발표(학번부여) • 2022~2학기/2023~1학기: 학부 소속으로 대학원 과목 학점 이상 이수, 연구활동계획서 대학원 6학기 이상 이수, 연구활동계획서 8학기 1회 제출 • 2023년 8월중: 대학원 등록 • 2023~2학기: 대학원 입학
학부정규졸업트랙 8+3 대학원 1학기 단속 학부 4년+대학원 1.5년 (총 5.5년과정)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 지원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 • 학부 7학기 재학생 (8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 학과(전공)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 2022년 4월중·지원 • 2022년 5~6월중: 합격자발표(학번부여) • 2022~2학기: 학부 소속으로 대학원 과목 학점 이상 이수, 연구활동계획서 8학기 1회 제출 • 2023년 2월중: 대학원 등록 • 2023~1학기: 대학원 입학
학부정규졸업트랙 8+3 대학원 1학기 단속 학부 4년+대학원 1.5년 (총 5.5년과정) 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 지원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 • 학부 6학기 재학생 (8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 학과(전공)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 2022년 4월중·지원 • 2022년 5~6월중: 합격자발표(학번부여) • 2022~2학기/2023~1학기: 학부 소속으로 대학원 과목 학점 이상 이수, 연구활동계획서 7학기(의) 8학기 1회 제출 • 2023년 8월중: 대학원 등록 • 2023~2학기: 대학원 입학

* 학부 편입생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불가
* 학부 졸업 학기 종강 후 1달 이내에 학사지원팀 협조를 통해 학사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학원 입학허가
* 학사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자격사실.
* 조기트랙(7학기)내 학사과정을 졸업 합격자는 학사졸업을 위해 8학기 이상 등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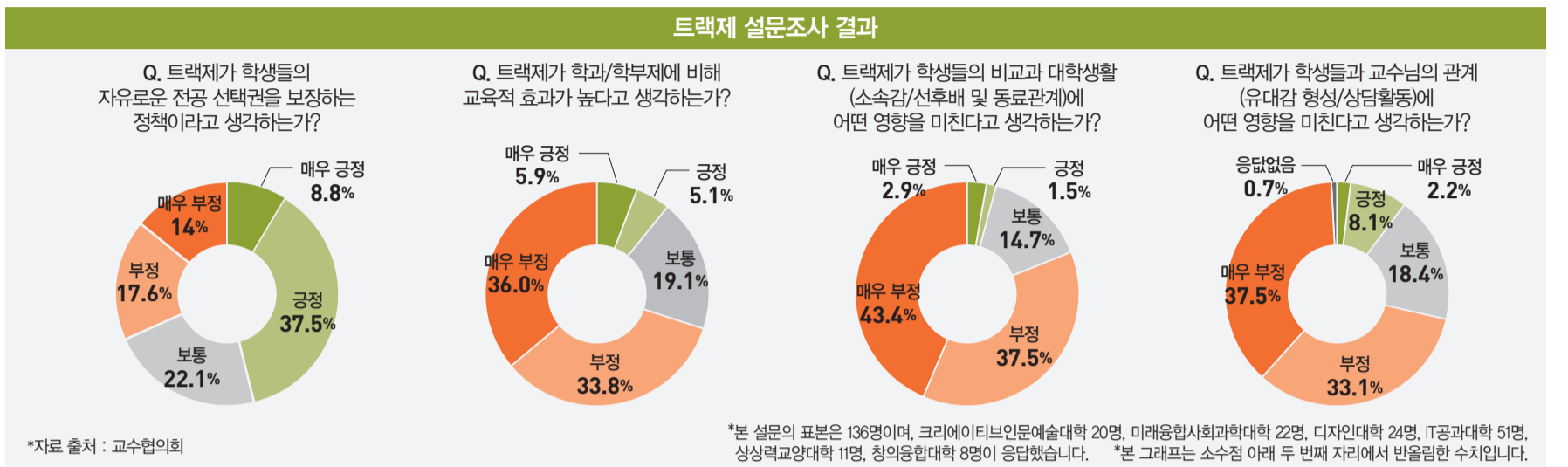
‘트랙제 설문조사’ 시행, 긍정과 부정 사이의 기울기는?

교수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트랙제에 대한 논의의 객관적 파악을 위해 ‘트랙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가 시행됐다. 설문조사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주도하에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대상은 본교 교협 소속 전임 교수 178명이었으며, 이 중 136명의 교수가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대상자 인적사항 파악 문항을 제외한 총 28개로 구성됐으며, 응답은 긍정·중립·부정을 5개의 척도로 구분됐다. 28개의 문항 중 트랙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3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25개였다.

교수들은 트랙제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개의 전공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트랙제가 학과(부)에 비해 자유로운 전공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학 후 전공 분야 선택과 관련해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미리 전공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존의 학과제와 비교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30.1%)’ 답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부정(22.1%)’ 답변이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교수들의 시각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보통(21.3%)’, ‘매우 부정(14%)’, ‘매우 긍정(1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종복(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1학년 때 다양한 분야의 전공 기초를 쌓고 2학년이 되기 전 트랙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대학의 트랙제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긍정(37.5%)’과 ‘매우 긍정(8.8%)’으로 총 46.3%의 교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어 ‘보통(22.1%)’, ‘부정(17.6%)’, ‘매우 부정(14%)’ 등이 잇따랐다. 이동주(사회과학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있어 트랙제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측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랙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팽배했다. 먼저, 교수들은 대체로 트랙제가 오히려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반응했다. ‘트랙제가 학과제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문항에는 ‘매우 부정(36%)’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33.8%)’, ‘보통(19.1%)’, ‘매우 긍정(5.9%)’, ‘긍정(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병은(교수협의회) 회장은 “트랙제가 도입 초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트랙제를 유지할수록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갈 잠잠한 것이지, 학생들의 취업에 타격을 없앨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다”고 전했다.

또 트랙제가 학과제였던 과거에 비해 학내의 유대관계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교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트랙제가 학생들의 비교과 대학생활인 소속감, 선후배 및 동료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는 ‘매우 부정(43.4%)’, ‘부정(37.5%)’이 과반을 차지했다. 총 80.9%의 교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용주(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는 “보통 1학년 때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쌓인다. 학과제랑 비교하면 트랙제에서는 그런 유대관계가 덜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석(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도 “트랙제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소속감을 부여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모가 보인다.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유대관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랙제가 학

생들과 교수님 간의 유대감 형성, 상담활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부정(37.5%)’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부정(33.1%)’이 뒤를 이어 역시 교수 과반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동주 교수는 “학과제 때는 학과 구성원끼리 행사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교수와의 유대관계가 잘 쌓였다. 하지만 트랙제로 변하면서 학과끼리 뭉치는 경우가 적어지고 교수와의 유대관계 형성도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한편, 학생 유치를 위한 트랙 간 경쟁이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의욕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주류를 이뤘다. ‘트랙 간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의욕 제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매우 부정(39.7%)’, ‘부정(29.4%)’으로 응답하며, 총 69.1%의 교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보통(17.6%)’, ‘긍정(11%)’, ‘매우

긍정(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재석 교수는 “학생 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해당 트랙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학생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했다.

교협 측은 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트랙제에 대한 단점을 부각하려고 조사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교수들이 전반적으로 트랙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학과제가 정착되는 것이 수십 년 걸렸듯이 트랙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학본부는 교협에서 받은 설문조사를 아직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밝혔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교협에서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아직 논의된 것은 없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본교는 2022년 개교 이래 첫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정해진 신입생 정원 대비 최종적으로 등록한 신입생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전민우(입학관리팀) 차장은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본교 입학에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증가했다는 값진 성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 내 미충원율은 8.6%(4만 586명)로, 본교 역시 근 4년간 정원 내 신입생 인원이 ▲2018년 6명 ▲2019년 5명 ▲2020년 7명 ▲2021년 1명 미달된 바 있다.

올해 본교의 정원 내 신입생은 총 1,461명

으로 미달된 인원 없이 모두 등록을 완료했다. 정원 내 신입생 모집 정원 및 등록 현황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야) 185명 ▲사회과학부(주·야) 244명 ▲동양화 인물수묵담채화 7명 ▲동양화 인물수채화 6명 ▲서양화 인물수채화 13명 ▲한국 무용 10명 ▲현대무용 8명 ▲발레 10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야) 98명 ▲ICT디자인학부(주·야) 92명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주·야) 20명 ▲IT공과대학(주·야) 424명 ▲상상력인재학부(주) 151명 ▲문학 문화콘텐츠학과(주·야) 70명 ▲AI응용학과(주·야) 80명 ▲융합행정학과(야) 7명 ▲호텔외식경영학과(야) 8명 ▲뷰티디자인학과(야) 8명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9명 ▲ICT융합디자인학과(야) 7명 등이다.

정원 내 주간 신입생 정원은 총 960명으로 ▲수시 667명 ▲정시 282명 ▲추가 11명 등의 신입생 모두가 등록을 마쳤다. 야간 역시 총 501명의 정원 중 ▲수시 369명 ▲정시 117명 ▲추가 15명으로 501명의 신입생이 모두 등록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재직자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의 정원 외 신입생 인원은 총 163명이 입학했다.

전 차장은 “올해 정원 내 입학 충원율 100%를 달성한 것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등 외부적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제14회 상상력 토크’ 성황리에 마무리

‘제14회 상상력 토크(이하 상상력 토크)’가 미래관 DLC에서 지난 22일 진행됐다. 상상력 토크는 신입생의 대학 생활 탐구 및 전공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누리(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다시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은 독일과 한국의 교육적 차이와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로 이뤄졌다.

상상력 토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65명으로, 상상력인재학부 신입생 151명, 그 외 재학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참가 가능했으며, 그 외 재학생은 구글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본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상상력인재학부 측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인 학생 10명을 선정해 김 교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개별 제공했다.

강연을 참관한 김진진(상상력 1) 학생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계속 발전한다면 더 좋은 교육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행사를 담당한 김혜연(상상력인재학부) 조교는 “행사를 통해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탐색해 볼 학문과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등을 배워갈 수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English Corner’ 참가자 모집

오는 6월 10일까지 상상력교양대학 교양 영어과정에서 ‘2022년 1학기 English Corner(이하 잉글리쉬 코너)’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원어민 교수와 1:1 대화, 영어 에세이 및 과제 첨삭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시행됐던 지난 학기와 달리 이번 학기는 오프라인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재·휴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고, 재학생의 경우 소정의 비교과 포인트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 재·휴학생과 졸업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다. 상세한 일정은 매주 월요일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된다. 해당 일정표에서 참여하고 싶은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하면 별다른 승인 과정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 일정 확인을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 학생에게는 1회당 비교과 포인트 2pt가 지급되며, 한 학기에 최대 20pt를 얻을 수 있다.

박소희(교양영어과정) 행정조교는 “잉글리쉬 코너는 준비해 놓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무료로 원어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교외에서 고가의 회화 수업을 듣는 것보다 낫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정성혁 기자 wtg0927@naver.com

‘온라인 3D프린팅 특강’ 진행

본교에서 온라인 3D프린팅 특강을 지난 3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강은 6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대상은 1학년에 한정된다. 희망자는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강을 통해 학생은 기초적인 3D프린터의 운영 방법을 배우고, 상상파크 내부 기자재를 다루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이수자는 비교과 포인트 20pt를 획득할 수 있다.

행사를 담당한 채서희(C&C교육지원팀) 연구원은 “기존 재학생은 지난 2년 동안 특강을 수강할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을 고려해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학기에는 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강은 우선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화 시 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강 진행과정은 안전교육 이후, ▲3D프린팅 시작하기 ▲탄커캐드로 모델링하기(1·2) ▲3D프린터 유저 되기 순으로 이뤄진다. 각 프로그램마다 25분씩 총 100분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내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 연구원은 “상상파크에 3D프린터가 있음에도 아직 사용에 생소한 분들이 많다. 본 강의를 수강하시고, 3D프린터를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윤자원 기자 dbswkdnjs0321@naver.com



청년희망적금, 누군가에게는 희망고문

가입 어려웠던 일부 청년 존재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 따라 초과된 예산 위한 해결책 필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직후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연이어 마비시킬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해당 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이 적금을 통해 시중 은행의 기존 상품보다 높은 이율은 물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된 청년희망적금에는 11개 은행에서 약 290만 명의 인원이 가입했다.

청년층의 높은 관심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추이」에 따르면 올해 1월 평균 금리는 2.39%였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금리가 5%며, 은행별 우대 금리도 최대 1%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도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혜택을 고려한다면 만기 시 최대 채금 금리는 약 10%인 셈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희망적금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입 조건과 관련된 문제다.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12월까지의 소득이 국세청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작년에 첫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다르다. 종합소득 신고는 첫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이뤄지는데, 가장 이른 시기도 5월이라

작년에 첫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올해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증명 가능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해당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이 이후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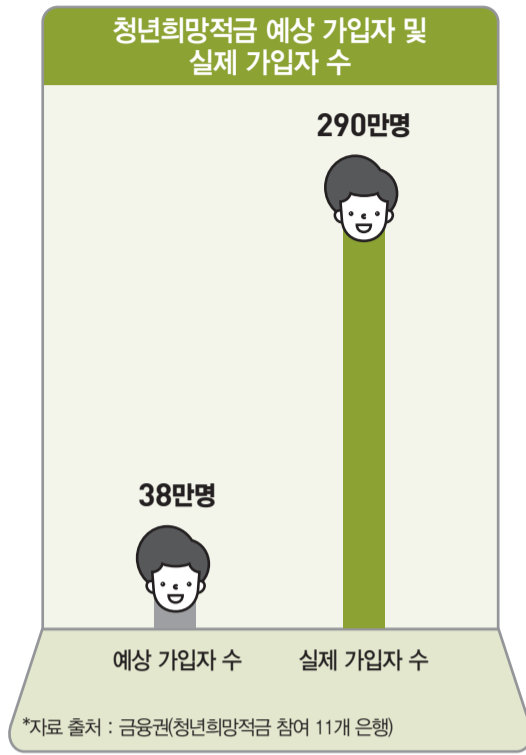
정부는 이 논란에 대해 작년 8월에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했을 뿐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청년희망적금을 주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남이산 과장은 “애초에 2022년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상품이었다”며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7월 소득이 증명되는 청년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3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을 확인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이나 8월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가 논의 단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서 교수는 “충분한 재원 확보와 소득 증빙 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많은 청년 중 일부만 자산증식의 기회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이 재개된다면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 기회를 놓쳤던 청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증명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존재했다. 과외를 비롯해 프리랜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다. 사업자등록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자신에게 알맞은 소득세 신고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녹록지 않은 일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의 증명 과정을 정부가 함께 해야 하고, 소득 증명의 주기 역시 1년이라는 단위에 얽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정책연구실장은 “개인의 소득 증명을 위한 신고 과정이 정부의 도움하에 체계화돼 간편해진다면 자발적 소득 신고가 늘고 청년희망적금 같은 복지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과외 등 소득 증명이 힘든 아르바이트 역시 소득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득이 없는 청년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청년희망적금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상품임과 동시에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금융상품의 특성상 정기적인 소득이 증빙돼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청년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 과장은 “적금은 정기적인 금융 상품이기에 때문에 꾸준히 저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기존의 소득 여부가 그 증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의거, 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증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규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본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애초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 소득이 없는 청년에 대한 여차별을 만들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저축상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금융상품을 디자인해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실장은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도 자산 형성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 여부를 떠나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복지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는 이미 작년 7월부터 월 단위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해 보다 적극적인 소득 파악이 가능해졌지만, 청년희망적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 연구실장은 “월 단위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됐음에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소득 파악 체계를 더 유동적으로 적용했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증빙이 어려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에 대한 해결책은 추후 나올 금융상품이 짙어진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청년의 상황을 고려하고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많은 청년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청년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 기획됐을 정책이 성공하게 추진되며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적 보완을 거듭하며 다음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으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청년들을 하나의 수혜성 정책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각기 다른 환경에 맞는 다방면의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서 교수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 다양한 청년층 모두에게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청년 역시 자산증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정책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진한 대비는 가입자 폭주에 대한 대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가 이번에 책정한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가 최대 금액인 50만 원을 매달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총 38만 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입자가 몰리며 혼란이 야기되자 당국은 모든 가입자를 무제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정부는 물론이고 다소 예산을 웃도는 가입자를 떠안게 된 은행 역시 감당해야 할 총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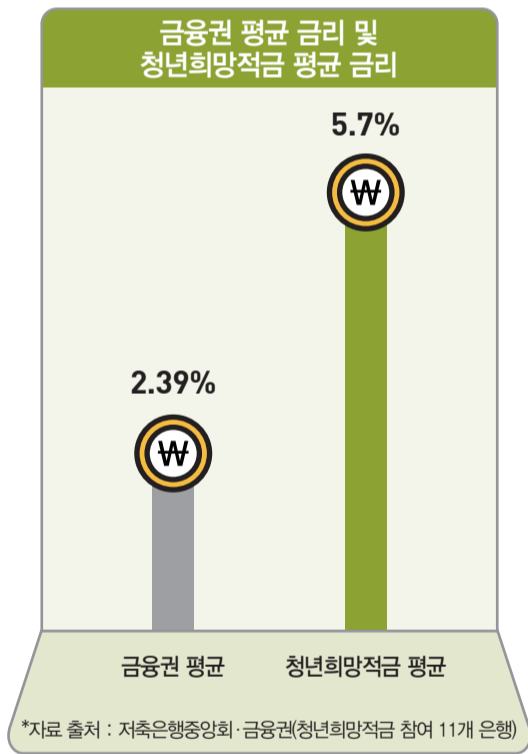
이에 예산을 산정하는 셈법도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0세 이상 29세 이하 경제활동인구는 약 400만 명이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38만 명보다 10배가 넘는 수치다. 심지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더 넓은 연령 구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 교수는 “충분한 재원 확보 후 신청이 이뤄졌다면 혼란의 예방이 가능했지만 정확하지 못한 수요 예측과 미흡한 상품 설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초과된 예산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정부가 초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적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청년을 위해 약속한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새로운 청년 맞춤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출시가 논의되며 예산 편성 혼란을 걱정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정책집속 공약으로, 총 10년간 월 70만 원 납입 시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통칭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린다. 최 연구실장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두 정책 사이 교통정리와 함께 예산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다방면의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른 예산의 지출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청년희망적금) 한 시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예산 부족 시 이율을 조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적금을 시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실장은 “현금성 정책과 달리 이자 지원 형식의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산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며 “또 다른 청년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변화에 적응하는 유동적인 정책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한기자와 함께 하는 시사한잔

대형산불, 지핀 것도 키운 것도 사람이었다

213시간의 악몽,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허염없이 불을 바라보아 했던 시간이다. 산불의 규모는 어떻게 야속하게도 속절없이 거대해져 갔을까.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지는 재앙은 이번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가운데, 결국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난달 4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되면서 2000년에 일어난 동해안 산불 이후 역대 최장의 산불 기록을 갈아 치웠다.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삼척시까지 번졌고, 산불의 규모가 막대해지자 울진과 삼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3일에 주불이 진화되기까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2만 3,993ha 정도가 피해면적으로 측정되면서 이번 산불은 거대한 재해로 남았다.

이번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록 발화의 원인은 사람으로 추측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대형산불로 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불이 시작된 4일에는 경상북도 일부 지역 및 영동권에 각각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강수량과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적었다. 이에 대해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위기가 꼽히는 근거는 올해 겨울철 기온이 3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점에 있다. 지난 50년 동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이 9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앞으로 대형산불은 기후위기 적응과 기후재난 대비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논평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예측도 언급되는데, ‘기후변화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극한 산불이 최대 14%, 2050년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 증가하는 등 산불이 더 빈번하고 강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산불 발생은 매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391건 발생했던 산불은 2018년 496건, 2019년 65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이명인(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산불은 풍속이 제일 높고, 상대습도가 제일 낮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봄철의 온난화 경향과 강수량 감소가 상대 습도의 지속적 감소를 만들어 내 산불 발생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단일목 위주 조림 사업이 대형산불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나무 위주로 숲이 조성돼 있는데, 소나무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산불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홍성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이번 대형산불은 지금까지의 산림 관리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나무 중심의 관리가 30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 산불에 약한 소나무 숲이 광범위하게 분포됐다. 활엽산에 처음으로 들어와 토양을 좋게 만드는 소나무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나면 숲마다 알맞은 나무들이

중심에 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형산불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산불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려우니, 차라리 산불이 대형으로 번지기 전에 초동 대처로 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말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CCTV 증대, 스프링클러 설치, 진화헬기 확충 및 가동률 확대 등이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예방 비용으로 너무 막대한 지출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형산불을 수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림 복구 비용, 피해 복구 비용, 진화 비용 등의 지출이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 전문위원은 “스프링클러 등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는 관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CTV 역시 진화를 위해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군 휴학’ 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인구 감소로 비자발적 군축에 대한 우려가 도화선이 되며 모병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모병제는 자원을 통해 병력을 수급하는 군사제도로, 군인이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서 존재한다. 현재에도 군대의 장교·부사관을 비롯한 간부는 모병제의 형태로 모집되지만, 징병제에 의해 병사로 입대하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개인의 의지로 입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꿈이나 그리던 상황일 것이다. 어쩌면 이는 곧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대점과 우려점이 상충하며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한 군대

최근 들어 모병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구 감소를 비롯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군대 관련 공약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측된다. 안석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병제를 향한 인식의 변화는 인구 감소 문제 외에도 현대에 이르러 군대를 직업전문주의로 운영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 또한 비자발적 복무가 더 이상 불필요해진다든 점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5월에 조사한 ‘모병제, 징병제 국민인식 변화’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2016년 35%에서 2021년 45%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징병제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48%에서 42%로 감소했다.

학계에서도 병사를 모병제의 형태로 모집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사의 100% 모병제 징집 ▲혼합 징집제를 통한 병사 징집 ▲병사 감원 및 부사관 증원 등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정육식(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혼합 징집제를 거친 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군 대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소하는 인구, 발전하는 기술

모병제 도입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다. 징병제는 강제 징집을 통해 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인구 유지가 필수적이다. 뚜렷한 청년 인구의 감소세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의 수가 줄자, 징병 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으며 이는 징집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9~34세의 청년 인구는 2020년 1,097만 명에서 향후 10년 동안 대략 18% 정도인 19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모병제의 확대는 부정할 수 없으나 시간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병사 징집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방부에서 밝힌 「20세 남성 인구 추계와 병력충원 전망」에 따르면 20세 남성과 병력 충원 인원의 수는 2020년에서 2060년까지 각각 약 22만 명과 약 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018년 「국방개혁 2.0」에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비군 50만 명조차 채우지 못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상비군은 현역병과 복무를 마친 지 4년 미만의 예비병역을 지칭한다. 남궁승필(우석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휴전 중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충분한 징집 인원은 필수다.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기반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군대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될 것이라 이야기한다. 또한 병력을 감축시키고 기술 중심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 국군이 나아가려는 방향이며, 이는 모병제의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말한 개혁을 통해 상비군 감축은 물론, 다양한 구조적인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안 책임연구원은 “첨단 기술력에 기반한 작고 강한 군대는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부합하며, 이는 선진국의 지향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은 “이제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병사의 숫자보다 병력 숙련도와 최첨단 무기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덧붙였다.

의지 없는 군인, 잃어버린 전문성

군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역시 모병제가 필요한 근거라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군인으로 복무할 의지가 있는 인원으로 군대가 구성될 수 있고, 전문성과 의지 모두를 갖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군은 군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는 청년을 강제 징집시키는 구조로 전문성을 띠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장은 “단기간에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꾸기 위해 (육체와 정신을) 몰아세우는 군사훈련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개인의 의지를 복돋기보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군인을 만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은 커녕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것을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의 분석 결과’ 속 ‘군 복무에 대한 인식’ 항목에 20대 남성 중 82.6%는 “가능하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군 복무는 잃을 게 더 많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3.5%가 동의했다. 정 대표는 “군대에 입대하며 미래를 위한 경험이 중단되는 것은 청년들에게 불평등을 느끼게 한다. 억지로 입대하는 사람과 직업으로서 의지를 갖고 입대하는 사람의 동기 부여와 숙련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모병제가 확대된다면 군인들이 자발적 의지로 전문성이 있는 집단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상목(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의지와 동기 부여가 전문성으로 이어진다면 군대의 수준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 처분율이 증가하는 상황 또한 군대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처분율은 전체 임명검사 대상자 중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징집 가능한 인원이 줄며 과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던 청년 역시 현역 복무 판정을 받는 상황이다. 작년 7월 병무통계연보에서 밝힌 ‘병역판정검사 현황’에 따르면 현역 처분율은 2003년 84.9%에서 2011년 91.5%까지 점차 상승하다 2020년에 가까스로 감소해 81.2%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도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병력의 공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지며 현역 처분율 역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모병제를 시행 후 직업 군인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징병 대상이 감소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 대표는 “아직까지도 현역 처분율이 굉장히 높다. 모병제와 혼합한다면 군 복무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복무제 등에 알맞게 배정되고 군의 전문성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뒤따르는 우려, 부족한 준비

반면,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대가 경제적 도피처로 오용돼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년만이 힘들고 고된 군대의 문을 두드리고, 이 때문에 전문성이 되려 하락하거나 기득권이 징병을 피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궁 교수는 “모병제가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닌 계층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에 대한 염려도 제기된다. 병사의 월급은 2021년 기준 45만 9,100원에서 최대 60만 8,500원이지만, 논의되는 모병제 시행 모델 속 병사의 월급은 200만 원 안팎을 웃돈다. 양 부연구위원장은 “2030년 중후반에 모병제를 통해 모을 수 있는 병력은 35만 명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병사의 월급으로 약 10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감당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고 꼬집었다.

모병제가 도입되면 늘어나는 급여만큼 병사의 수가 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 대표는 “현재 병력 규모로 모병제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병제는 병력의 규모가 감소해 유지비가 줄어 들 것 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국방 예산의 증가세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2019년 국방부가 밝힌 2020년 국방 예산은 50.2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금액이다. 국방 예산은 2005년 20.8조 원에서 2011년 31.4조 원 2020년 50.2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교수는 “(추세적으로 볼 때)한국의 전체 국가 예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국방 예산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모병제의 도입에는 세부적인 예산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 병사의 수, 월급, 복무 기간 등을 담은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안 책임연구원은 “당장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필요 경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세부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변화를 병행하며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은 “모병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절대적인 병력의 수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지난 24일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병력의 수적인 차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월 12일 해외 군사력 측정 기구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보고서 「RUSSIA-UKRAINE: AT-A-GLANCE」에 따르면 러시아의 병력은 예비군 포함 약 200만 명, 우크라이나는 약 90만 명이다. 국가별로 군사력과 재정이 상이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인 병사 수가 국가의 군사 경쟁력에 일조한다는 이야기다. 양 부연구위원장은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커져도 기본적으로 병력 수가 부족하면 적을 제압하기 힘들다”며 “우리의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주변국 역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 교수는 “기술과 군사 전략과 별개로 군대가 필요한 최소한의 병사 인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렇기에, 모병제

모병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 속, 어떤 방향의 군대를 택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모병제의 단계적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모병제에서 병력으로 수급 가능한 인원과 예산, 군사적 전략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모병제와 징병제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충분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2017년 다시 징병제를 일부 수용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약 10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전환이 이뤄졌다. 병사의 계약기간이나 예산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러 의문점들을 불식시키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는 불필요한 논란만 반복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진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은 “모병제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확신은 물론, 감당 가능한 예산이 편성된 후 국민적 합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알맞은 전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궁 교수 역시 “언젠가 모병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전환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제시된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윤 당선인은 인간 전투병을 대신할 무인전투체계와 과학 기술 전문 전투요원 등을 내세우며 모병제를 통해 2030년에는 40만 명, 2040년에는 30만 명까지 현역 병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병력의 숫자만 논의한다면 부실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군사적 전략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병역 제도라는 것은 강한 국방력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시기상조라는 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려점을 차분히 검토하고 극복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junheuk0622@naver.com



**우리가
지나친
순간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친, 혹은 무관심 속 잊혀지고 있는 역사는 없을까. 백암 박은식 선생은 나라는 잃었을지언정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라 말했다. 우리가 지나친 역사적 사건을 찾아 잊힌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광복 후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 다툼으로 시끄러웠던 한반도. 유독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극한의 대립 속에서 쓰러져갔다. 제주도민들이 이념의 계곡 속에서 익사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념과 피로 가득했던,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뒀던 제주의 한을 따라가 보자.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냉전의 바다에 빠진 외딴섬 제주

대립의 한가운데 놓인 제주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막을 연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에 이르기까지 당시 제주도민 중 10%에 이르는 자가 사망했다고 짐작될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야기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화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947년, 삼일절을 맞은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사건은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했다. 도민들이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 대회’가 끝나고 이동하던 중,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치여 6살 아이가 다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 격분한 시민들은 경찰서로 돌아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이를 폭동으로 오인한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발포했다. 그 결과 시민 6명이 사망했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양정필(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실제로 6명의 사망자 중 5명은 등에 총을 맞았다.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건 이후에도 경찰 측은 별도로 진상을 규명하거나 사과하려 하지 않았고, 도민들은 항의의 의미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도민들의 이러한 항의에도 경찰은 발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경찰서는 습격하려는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다. 이때 이뤄진 시민들의 대대적인 총파업의 규모는 상당했다. ‘3·10 총파업’에는 제주도청, 경찰과 같은 관공서를 비롯한 여러 민관 기관이 참여하는 등 도민 95% 이상이 동참해 ‘3·1절 발포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개중에는 남조선로동당(이하 남로당)과 같은 좌익 세력도 힘을 보탰다.

총파업 이후, 도민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삼팔선 이남 지역을 통치하던 미군정이 총파업의 주체를 남로당으로 오인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좌익 세력의 손에 넘어간 ‘빨간 섬’으로 규정됐다. 양유석(제주4·3연구소) 간사는 “유례없는 민관 총파업은 좌·우익이 모두 참여한 정당한 분노며 항의였지만, 미군정은 민심을 수습하려는 노력보다 이를 남로당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하는 등 제주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탄압을 위해 극우 세력인 서북청년회(이하 서청)*가 경찰로 제주도에 투입됐다. 극단적인 성향의 서청은 ‘빨갱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무고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미군정의 지시로 서청의 투입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때 서청은 조선경비대(이하 경비대)**로 투입되기도 했다. 결국 무장봉기 전까지 1년여간 2,500여 명의 도민들이 체포됐으며, 구급자에게 이뤄진 경찰의 고문으로 청년 3명이 희생당했다.

이 같은 탄압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에서 봉화가 타오르면 서 남로당의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남로당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등을 대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무장대는 12곳의 경찰서와 함께 서청 등에 소속된 우익 인사의 가택을 습격했다. 양 교수는 “경찰 탄압에 대해 어떻게든 막고 저항해야 한다는



사진 출처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학살한 민간인의 시신을 짓밟고 선 군인들



사진 출처 : 『제주4·3사건추진조사보고서』

▲2007년 별도봉에서 발굴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사진 출처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수용소에서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

부분이 컸다”며 “많은 도민이 심적으로 동조했던 것 같다. 육지 경찰의 탄압으로 동네마다 젊은이가 고문받고 구타당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갈등은 무장대와 경비대가 같은 달 28일에 평화협상을 타결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듯했으나, 사태는 일부 우익 집단의 테러로 인해 견장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초기에 경비대는 무장대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평화롭게 수습하고자 했다. 이에 호응한 무장대는 극적으로 경비대와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으나, 사흘 뒤 일부 우익 세력이 민가에 불을 지르며 협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한 미군정이 강경 진압을 지시하며 사태는 도리어 확산됐다.

무장대는 제헌 국회의원선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봉기를 지속했다. 이들은 선거인명부를 빼앗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을 살해했다. 제헌 국회의원선거 당일에는 투표소를 공격해 투표용지를 파손하고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보내 투표를 막았다. 결국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주도에서만 투표수가 유권자의 과반을 넘지 못해 당시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가 무효로 처리됐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제주도의 상황은 과국으로 향했다. 1948년 8월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태를 빠르게 진압하고자 했다.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한 무장대를 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中山間) 마을을 통행하는 자는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됐다. 산에 숨은 무장대와 해안 마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무차별적인 ‘초토화 작전’이 시작됐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해안 마을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는 초토화 작전의 일환으로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도민들을 집단 학살했다. 일부 도민들은

토벌대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무장대에 역으로 살해당했다. 해안 마을로 이동하라는 소개령이 떨어진 몇몇 중산간 마을에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전에 토벌대가 진입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 4개월간 토벌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 1월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운동장에 모아두고 학살해 이틀간 400여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

잔혹했던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 6·25전쟁이 발발하며 제주도의 아픔은 지속됐다. 좌익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예비검속이 이뤄지며 다시 한번 제주도가 피로 물든 것이다. 또한 전쟁 기간 중 제주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형당했다. 1954년 9월 21일, 마침내 중산간 마을에 내려졌던 통행금지령이 풀리면서 깊은 상처를 남긴 제주4·3사건은 일단락됐다.

갈등 속 실종된 인권과 평화

제주4·3사건이 휩쓸고 간 제주도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제주도민은 삶의 터전을 잃음과 동시에 이웃과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깊은 상처를 떠안았다. 4만여 채의 집이 소실됐고, 중산간 지역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사라졌다. 마을 자체가 사라진 곳도 다수 존재했다. 생활 기반인 학교와 공공기관, 산업시설은 파괴됐다. 특히 토벌대와 무장대 양측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에 달하는 25,000~30,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념에서 시작된 제주도민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이념의 대립과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다시 한번 방치됐다. 김종민(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은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연좌제’와 ‘레드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온갖 치욕과 분노, 좌절과 체념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종결 후, 50여년이 지난 2000년이 돼서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조사를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가 이뤄졌다. 양정필(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유족으로서의 나라가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상규명으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도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죄하기 위한 공적인 근거도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처리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제주4·3’의 바른(正) 이름(名)을 찾아야 한다는 이른바 정명(正名) 논쟁이다. 즉 제주4·3의 역사적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양 간사는 “과거보다 많이 진전됐으나 제주4·3은 정명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폭동, 항쟁 등의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이어 양 교수는 “입장에 따라 폭동, 항쟁, 통일운동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제주4·3의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4·3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 제주4·3사건은 이념 등의 이유로 빚어진 갈등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양 간사는 “이념적 대립이 얼마나 무섭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은 “제주4·3사건을 통해 평화가 깨지고 인권이 유린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북청년회 :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된 극우 성향의 민간단체로 좌익 세력 탄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조선경비대 : 남조선국방경비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으로 광복 이후 국내 치안 유지에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조직

“
이념 갈등 속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

· 삼 학 송 ·

확실한 사후처리를 원한다

매 학기 초마다 반복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 바로 '수강신청'이다. 과거 본교의 수강신청 기간은 '악몽'이라 불릴 만큼 혼란했다. 상황이 많았다. 2019년 3월에는 학생들이 서면신청을 위한 밤샘 대기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오전 10시 30분부터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전날 밤 11시경부터 줄을 선 학생도 존재했다. 2021년 3월에는 수강신청 잔여인원부족 사태가 일어, 학생에게 개별 전화로 수강취소를 요구한 적도 있었다. 강의계획서가 수강신청 기간 전에 게재되지 않거나, 수강신청 책자에 적힌 일부 강의의 교수·과목명이 실제 종합정보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은 비교적 빈번한 일이다.

이번 학기 역시 수강신청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다. 3월 3일 오전 11시에는 주·야 교차수강 신청이 가능해야 했으나 약 4분간 신청이 불가능했다. 원인은 수강신청 시스템의 데이터 설정 오류였다. 담당자가 수강신청의 종료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작년 날짜를 입력해버린 것이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후 처리 과정이다. 본부는 학사지원팀에 직접 연락한 학생을 대상으로만 잔여 인원이 있는 강의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부분의 강의는 서면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서너 명의 여석을 준비한다. 여석이 있는 강의에 한해 학생이 서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상황이다.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본부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을 구제하려 했다는 이야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서면

신청을 위해 마련한 자리가 있었다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안내 후 진행했어야 했다. 문외한 학생에게만 선택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잠시 중단한 후 재개하는 등 학교에서 공정하게 상황을 수습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원인 등을 학생에게 공지하는 일 역시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당시 주간도 야간도 교차신청이 불가능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다. 3월 3일에 교차 신청은 못하더라도 소속 시간대의 수강신청 자체는 가능했기 때문에, 이보다 4분 늦은 교차 수강 희망자는 이미 비교과 수강 신청자들보다 한 발짝 늦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강의는 신청해보기도 전에 마감됐다. 특히 통상적으로 본교의 잔여인원은 주간 강의보다 야간 강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안 그래도 적은 잔여석을 노리던 야간 소속 교차 신청자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빠르게 수습한 학사지원팀과 정보화팀의 노고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치하할만하다. 수강 정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모든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는 말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수강신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된다. 휴학도 고려할 정도로 학생에게는 삶을 좌지우지할 큰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본부는 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신혜림 편집국장

■ 의화정

자격 시대의 단상

이 글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되어 병원에 첫 출근을 하는 꿈으로부터 비롯됐다. 원장 선생의 환대 속에서 병원 문을 들어서며 설레던 순간도 잠시. 꿈속의 자아는 의사 면허가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스스로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자 제발, 부디 환자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슴 졸이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조바심은 금세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렇게 쫓기듯 현실로 돌아와서 내려갈 길이 모양이 꼴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의 출현 이후 위와 같은 압박, 정확히는 존재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자격'이란 낱말을 생각하는 일이 잦다. 시대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선사하는 '선생의 자격' 말이다. 어딘가에 있을 학생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지식을 녹화하는 일이 지속될수록 그러한 생각에 자주 함몰되며 대학의 역할과 선생의 자격을 자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같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라면 인터넷을 검색해보는 일이 더 빠를지도 모르고 책 한 권을 정독하는 것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에 빠진 선생과 그러한 강의라도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학생 간의 암묵적 합의는 우리 시대의, 어쩌면 매우 슬픈 자화상이었다. 2년제 대학을 다녔던 학생이라면 실로 환멸에 가까운 일이었으리라. 자격을 얻기 위한 나름의 고투가 일면 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는 자본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원천이 과학혁명에 있다고 얘기한다. 돈이란 흘러야 하고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될 것인데, 그렇게 만드는 힘이 과학이 만든 기술 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또 다른 원천은 '자격'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게 하고 숨 쉬게 하는 원천인데,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동시에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을 때 자본주의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타자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 어쩌면 매우 소박한 욕심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자격을 얻고 그렇게 취득한 자격이 직업을 가져다주는 일, 그리고 그러한 직업이 꿈이라 불리는 우리네 쓸쓸한 현실까지 모두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자격이 가져오는 책임의 진정성이어 아 한다. 일명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또한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어떤 형식이든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당연시되는 자격의 뻔뻔함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또 다른 힘의 근원으로서 자격이 합의하고 있는 그러한 신본적 속성을 되돌아보게 했다.

이쯤에서 결론을 내려야겠다. 머지않아 도래할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네 욕망을 대신하는, 즉 자격이라는 이름의 계급적 성취를 소거할지도 모르며, 정말로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마침표를 찍을지도 모른다. 과학혁명(?), 혁명이란 말이 가능하다면 과학기술이 자격 시대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임형모(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지난 3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 및 학생 의견 수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학생 의견 수렴 ▲교육부의 고등교육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대학 현실을 반영한 재정지원 정책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학과 교육부,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개편할 때마다 전반적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교육당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더는 통보가 아닌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다. 김지윤 기자

■ 기자수첩

해이함 속에 표류하는 '공정선거'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투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투표에 대한 부실관리로 일선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부실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논란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실수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지난 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했다는 논란이 단적인 예시다. 이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선관위의 해명도 웅색하기만 하다. 투표소마다 1개의 투표함만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에 의해 별도로 확진·격리자를 위한 투표함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후 변경된 본투표 방식처럼 확진·격리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의 시간을 분리해 같은 장소에서 투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결국 투표지는 봉투나 바구니 등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거됐다.

이 밖에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가 가려진 곳에 보관된 일도 있었다. 보관된 투표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없다면 누가 투표지에 무슨 짓을 할든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이 역시 부정

선거에 대한 의심만 불 지핀 촛구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3차 레나 사과문을 발표했다. 어김없이 본투표에서도 논란은 제기됐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이다. 이 역시 선거의 4대 원칙인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일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라는 기관명이 무색하게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같은 행위로 대선은 미심쩍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선관위, 아니 나아가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관위는 '미안하다'는 말로 선거를 치르려 않고, 부디 행동으로 선거를 치러주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 낙산에 올라

당신이 잠든 사이

새로운 해가 떠오른 지도 어느덧 석 달,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 격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열고 누구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 바로 22년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 '바른생활 루틴'에 해당하는 이들과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바른생활 열풍은 올해 역시 그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아마도 열기의 시작은 '미라클 모닝'이며 그 주체는 MZ세대가 아닐까 싶다. 미라클 모닝이란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독서, 운동 등을 하며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른' 아침에 있다. 하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침은 사실 정신없이 소비하는 시간 싸움의 장이다. 미라클 모닝은 이런 시간을 온전히 본인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집중하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미라클 모닝의 열풍을 가져온 MZ세대의 성향이다. 정치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의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는 이 세대는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는 중이다. MZ세대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신을 중요시하면서도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순이 존재한다. 자기관리를 위한 바른생활은 바로 이런 성향을 파고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만의 바른생활 루틴을 SNS를 통해 남에게 인증하면서도 이를 통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새로운 습관에 대한 다짐을 바로잡는다. 새로운 세대와 그 세대에게 흥미거리로 작용한 일종의 도전이 맞물리며 만들어진 트렌드가 바로 '바른생활 루틴'인 것이다.

분명 건강한 행동은 맞으나 그 방향성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단순히 남에게 나의 바른생활을 과시하고 나 자신을 꾸며내기

위해 루틴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우선적으로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진정한 '바른생활 루틴'으로 거듭나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 칼럼을 읽은 당신께 바라는 것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나 자신마저 잃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색을 잃고 있는 당신에게 그 무엇보다 온전한 본인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의 정답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가 깨어있는 새벽을 살아가는 이들의 색깔은 무엇일지, 또 그 안에 당신의 색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죽은 밤과 모두가 살아가는 아침 사이에서 본인의 정답을 찾길 바란다.

정지민(인문 2) 학생

기자사령

수습기자	김지영(인문 1)	정상혁(인문 1)
	박희진(인문 1)	조예원(인문 1)
	백주영(인문 1)	김현영(매선 1)
	우가영(인문 2)	강승원(IT 1)
	윤지원(인문 1)	임리빈(IT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관 박선옥 편집국장 신혜림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제 16 회

사진공모전



모집기간

4월 4일(월) ~ 4월 29일(금)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오프라인 제출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 직접 제출(10:00 ~ 18:00)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79호 (6월 7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 가작 1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유의사항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6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자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